

중부내륙선 철도노선 결정 및 조기착공 건의안

의안 번호	722
----------	-----

발의일시: 2006. 9. 7

발 의 자: 신순철의원외 인

1. 제안이유

중부내륙철도사업의 노선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선변경 요구와 이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대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조기에 착공할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2. 주요내용

- 가. 오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충주 북부권 주민들은 예비타당조사 노선(안)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으나, 최근 노선변경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함
- 나. 국가계획에 반영된 평택~충주~원주간 횡단 철도망을 고려할 때 당초 노선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며,
- 다. 당초 노선이 현 충북선 철도의 충주역과 연결되어 이용에 편리하며 지역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당초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임.
- 라. 당초 노선이 통과 예정인 충주 북부권은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도로교통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철도노선의 통과는 국가 안보면에서도 매우 필요함.
- 마. 따라서 노선변경으로 인한 지역내 소모적인 논쟁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대립을 불러오는 노선변경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고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당초노선(건교부 제2안)대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건의

3.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4. 붙임 : 중부내륙선 철도노선 결정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건의문

중부내륙선 철도노선 결정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건의 의 문

존경하는 추 병 직 건설교통부 장관님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주시의회는 21만 시민과 더불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이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21세기 국가 물류·SOC 네트워크의 큰 그림인 「21C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도교통의 불모지인 충주시를 비롯한 중부내륙 주민들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더욱이 지난 1999년 이천~여주~충주 구간이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꿈만 같던 “전철 타고 서울 가는 날” 이 실현된다는 부푼 희망속에 착공일 만을 손꼽아 기다려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취약해 오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충주 북부권 주민들은 기획예산처의 철도 노선(안)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새삼스럽게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추 병 직 장관님 !

건설교통부의 2가지 노선대안은 우리 충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도 완전히 거리가 먼 노선(안)입니다.

우선, 대안노선이 600억원이상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하나 국가계획에 반영된 평택~충주~원주간 횡단철도망을 고려할 때, 충주 북부권을 통과하는 당초 노선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조사에서 본 노선만이 유일하게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노선이 도심에 위치한 현 충북선 철도의 충주역과 연결되어야 이용에 편리하며 지역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도심을 통과하는 당초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금가면 일대는
충주 제19 전투비행장을 비롯한 다수의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도로 등 교통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이 지역으로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것은 국가안보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 병 직 건설교통부 장관님 !

우리 시의회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지역내 소모적 논쟁은
물론,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선변경 요구와 이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대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 논의를 더이상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아울러 다수의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부합되며 국가예산 투자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당초 노선안(건교부 제2안)대로 조기 착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6. 9.

충주시의회 의원일동